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2.5%에도 못미쳐

금고 이자율 기준금리보다 낮은 지자체 79곳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

한병도 의원 “이자율 공개, 선택 아닌 의무”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

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농협은행) △부산 중구 0.60%(부산·농협은행) △충북 제천시 0.82%(농협·산한은행) △경기 포천시 1.06%(농협은행) △경북 상주시 1.14%(농협·아이엠뱅크)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농협·제주은행) △인천 부평구 5.28%(신한은행) △광주 북구 5.07%(광주·국민은행) △충북 영동군 5.04%(농협은행) △광주 남구 4.87%(광주·국민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1.99%) △세종(2.23%) △부산(2.36%) 순으로 낮았고, △제주(5.62%) △서울 (3.74%) △광주(3.24%)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잡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코스트코, 상생 협약 체결

2일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장,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와 송혜숙 범창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스트코 익산 입점 상생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국토부장관 가시적 행보

김윤덕 장관, 10대 건설사 대표 만나 애로사항 청취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1일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가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건설사들은 김 장관에게 ‘책임준공 제도’로 인한 부담을 거론하며 ‘공사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한건설협회장 및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을 포함해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인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약 1시간 30분 동안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건설사들과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면서 소통을 중요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공사기간 및 공사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책임준공’ 제도로 인해 주말 공사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사는 PF 자금을 빌려줄 때 영세한 시행사 대신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채무 인수 등 추가 신용 보장을 요구하지 않느냐”며 “경기가 좋을 때는 전력저렴 잘 풀려가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땐 공기가 늘어나고, 결국 공사비도 급증하게 된다는 게 건설사 대표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 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오전에는 세종시 전통면세점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현장을 찾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이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와 전주 통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중기 단체들 “완주·전주 통합, 전북의 생존전략”

“지역 발전·기업 성장에 필수”… 행정 통합 강력 촉구

전북지역 중소기업 단체들이 전주와 완주의 행정 통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병진)는 회원단체인 도내 주요 중소기업단체장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발전과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진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북 중소기업인들은 오래전부터 전주와 완주를 오가며 생활해 왔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완주 기업에는 전주 63만 인구의 시장이, 전주 기업에는 완주 10만 인구의 새로운 시장이 열려 상호발전 기회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전주·완주 통합 시 약 85만 인구의 거점 도시 형성이 가능하다고 제시됐다”며 “이는 전북의 경제 성장 가

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된 호소문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대응 △투자·인구 감소 극복 △기업 유치와 창업 인프라 조성 △청년 인재 유입 및 AI 등 미래 산업 육성 △규제·조례 일원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이 담겨 있다.

유재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회장은 추가 발언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의 허약한 체질을 보완하는 보약과 같다”며 “85만명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면 서남권 문화·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충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회장은 “통합이 전북 미래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강동오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은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역사적·행정적 분리를 극복하고 인구 100만 이상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오상근 기자

“도내 소방공무원 상담사 배치, ‘6명’ 보도는 오해”

전북소방, “16개 관서 모두 전문 상담사 배치 완료”

전북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 인력 현황을 둘러싼 일부 보도가 실제와 다르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일부 방송사에서는 전북 16개 소방관서에 배치된 상담사가 6명(37.5%)에 불과해 앞으로 10명의 상담사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재 16개 관서 모두에 상담사 1명씩

배치해 총 16명의 전문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언급된 ‘6명’은 시·도별 예산 배분 기준에 따른 수치일 뿐, 실제 상담사 운영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2025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8월 말 기준 16명의 전문 상담사

를 배치했다”며, “권역별 배치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상담사 배치 확대와 비대면 상담 시스템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개최 잇따라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의장 박일)는 2일 제30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억의 또 다른 이름, 기록’을 통해 정읍의 기억을 보존하는 영상 기록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황혜숙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 확대, 환경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확대와 배출방법의 홍보 강화를 촉구했으며, 이도형 의원은 ‘정읍시의 공공환경시설 약취개선, 이제는 과학적 해법을 결합해야 한다’를 통해 미생물제 투입, 확산경로 분석과 같은 과학적 저감 방법 실시를 제안했다.

또한, 한선미 의원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자’를 통해 배달노동자, 노인돌보미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인프라 시설 구축을 건의했으며, 서항경 의원은 ‘하차는 가능 승차는 불가능,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를 통해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이동권보장을 위한 전주방면 간이정류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읍시 제안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3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장 조민규)는 2일 하루

일정의 제318회 임시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원포인트 회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신)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충실한 심사를 한 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액된 8,973억원으로 최종 심사했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과 관련된 조례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날 본회의에 처리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의원연구단체인 ‘원정정책연구회’, ‘기후위기대응농업정책연구회’가 등록되고 활동계획이 승인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부안군의회 (의장 박병래)는 2일 제364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예결위를 열어 민생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총 19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군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으며, 이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기계회차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제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가 시작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확정

전북에서 활동 중인 박지원 변호사 등 12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최광호 홍보소통국장(사진)은 2일 오후 중 앙당에서 민주당의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12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확정은 당원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선 공론화 과정’의 시작으로, 앞으로 공개 배심원단 심사, 온라인 토론회, 합동 연설회 등 다채로운 선출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종 후보 명단에는 24세 청년, 아파트 동맹 대표자, 은행 노조 지부 위원장, 변호사, 노무현재단 지역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 성별을 대표하는 평당원들이 포함됐다.

전북도당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평당원들이 후보로 나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더욱 뜻깊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전주시 체육회

장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활동과 시민 참여를 꾸준히 이어온 박지원 변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박 변호사는 38세의 전북 출신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지역 사회 공헌 경험을 바탕으로 당원 권리 강화와 정책 실현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리당원인 한 관계자는 “박 변호사는 전북 관리당원 사이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에는 약 35만명이 더불어민주당 관리당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최고위원 선출은 당원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첫 사례로서 명실상부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당은 남은 과정에서 당원들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통 창구를 마련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집중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추석 명절을 맞아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주동안 ‘추석 명절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긴 연휴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추석 명절 화재예방대책은 △화재위험요인 제거 △화재안전 환경조성 △도민 홍보활동 등 3개 과제로 추진된다. /이만호 기자